

전국 24개, 충남 8개 지회 원청교섭 요구 공문 발송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26년 단체교섭 방침에 따라 하청·자회사 지회가 원청자본을 상대로 교섭요구 공문(단체교섭권자인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1월 23일까지 원청교섭 요구를 한 지회는 총 24곳, 7,040여명에 달하며 대상 원청회사는 13곳입니다. 충남지부 소속 지회는 8곳(조합원 3,600명)입니다.

공문 한 장 보냈을 뿐인데, 자본가집단과 보수언론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세상이 망한 것처럼 호들갑입니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사건에서 보듯 노조법 개정 이전에도 법원과 노동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리는 확립되었습니다. 금속노조는 매년 1월 모든 지회가 일제히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고 창구단일화 절차에 돌입합니다. 원청교섭 요구도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이 무엇이든 우리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와 절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충남지부는 1월 20일 현대자동차산사내하청, 현대제철비정규직, 현대모비스 아산, 서산, 천안, 아산물류, 비엠아이 지회의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원청 본사에 내용증명과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교섭요구 대상은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비엠아이입니다. 모두 현대차 재벌그룹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사업장입니다. 충남지부가 원청 본사 관계자들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누구도 공문을 접수하려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원청 자본이 원청교섭 요구에 무대응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투쟁으로 교섭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이 원청자본을 우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현장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수십년간 권한도 없는 하청·자회사 사측 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해왔습니다. 하청사장들도 우리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원청자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원청자본은 불법파견으로, 자회사 설립으로 권력과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권한과 이윤만큼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할 때가 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시행령 집어치우고 원청교섭 촉진자 역할 다하라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노동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회가 밝힌 노조법 2조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번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원청교섭 요구는 앞으로 노동부가 노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주범임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또 수정해서 입법예고를 했지만, 탄생하면 안될 희대의 노동악법인, 교섭창구단일화를 토대로 설계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법 시행령은 원청자본에게 교섭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에 발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최우선으로 2월 노조법 시행령 폐기 투쟁에 집중할 것입니다. 3월 원청자본과 교섭할 구체적 요구안을 금속노조와 각 현장에서 확정하고 4월 단체교섭 상건례를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준비된 곳은 즉각적으로 원청자본에게 교섭시작을 요구할 것입니다.

노조가 무엇을 요구할지는 노조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노사가 무슨 의제로 교섭을 할지는 노사가 만나 결정하면 됩니다. 원청자본은 노조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교섭장에 나와 주장을 하면 됩니다. 교섭의제, 교섭방식, 교섭대상에 대해 원청자본은 물론 어떤 법률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도 축소시키고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30조 제3항입니다. 노동부는 원청교섭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합니다. 노동부는 원청교섭을 활성화하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부는 더 큰 노사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노사대화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

시행령 필요없다! 원청교섭 방해말라!

충남지부 원청교섭돌입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26.1.28(수) 11시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앞

(이후 천안지청장 면담)

* 충남지부 전체지회 상근간부 참가